

트랜스젠더 차별은 신종 코로나보다 더 나쁘다

관련 기사 4~5면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인터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금이라도 공공의료
강화해야”

3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중국 대중,
시진핑 정부에
분노하다

6면

자본주의 체제는
감염병 확산을
촉진한다

2, 6면

트랜스젠더
차별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4~5면

KTX 통합
약속도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

7면

가스공사
비정규직
파업

8면

온라인 기사

- 서울 도시가스 여성노동자 투쟁
- 서울지하철, 기관사 대량 징계 추진
- 알렉스 캘리니코프 칼럼
- 혼란을 거듭하는 공식정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노동자 건강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지배자들

정선영

올해 1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5.4퍼센트나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물가는 치솟으니, 중국 노동계급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노동자 지원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막대한 자금을 풀며 기업 지원책에는 공을 쏟고 있다. 인민은행은 기업 지원을 위해 2조 9000억 위안(약 500조 원)에 달하는 금융 자금을 풀었다. 중국 정부는 718억 5000만 위안(12조 원가량)의 예산을 지방정부에 지원했다.

후베이성을 제외한 지역에서 2월 10일부터 공장 가동도 재개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의 건강이나 안전보다는 부품 수급을 우려한 다국적기업들과 중국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조치일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증이 확산되지 않을까 불안해 한다.

중국 공장 가동 재개를 압박한 세력 중에는 한국 자본가들과 정부도 포함된다. 중국에서 생산이 중단되면서 이번 주에 현대·기아·쌍용·르노삼성 등에서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한국은 중간재의 38퍼센트가 중국산이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생산 차질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가용한 협력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측에 “부품기업 생산재개 요청”을 하겠다고 했다.

전 세계 기업들의 중국산 중간재 의존도는 2005년 10퍼센트에서 2015년 20퍼센트로 늘었다. 그런 만큼 전 세계 자본가들도 중국 공장 가동에 이해관계가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생산이 얼마나 세계화돼 있는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된 만큼 세계 자본주의에 타격을 미칠 수 있는 중국 노동계급의 잠재력이 상당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에 힘을 쏟고 있지만 올해 1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4퍼센트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6.1퍼센트 성장해 29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 성장률은 더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더욱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별연장근로

한국은 수출이 올해 1월까지 14개월째 감소하며 경기가 악화해 왔다. 지난해 제조업 고용은 그 전해에 비해 9만 명가량 줄었다. 노동자들이 경기 침체의 고통을 직격탄으로 맞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생산에 차질을 빚는 기업들에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주겠다고 하며 기업 지원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생산 차질을 빚는 기



이 시국에 르노삼성에서는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회사 위기 책임 전가 중단하라

업들에게 기업당 수십억 원을 지원하겠다고도 한다. 2조 원에 가까운 정책금융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상반기에 올해 예산의 62퍼센트를 써서 경기 진작에 나서기로 했다.

반면 정부는 평소의 몇 배로 오른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가격을 통제하자는 제안에는 응하지 않았다. 큰돈이 드는 일도 아닐 텐데 말이다. 시장의 자유를 매우 중시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기는커녕 올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예산을 114억여 원이나 삭감한 바 있다.

이들이 어느 계급의 편에 있는지 분명히 보여 준다.

부품 국산화가 문제를 막을 대안일까?

최근 중국에서 생산이 중단돼 한국 자동차 기업들에게도 생산 차질이 벌어지자 부품 국산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부품 국산화를 위해 관련 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얼마 전 금속노조가 낸 완성차 조업 중단에 관한 논평에서도 부품 국산화와 중소 부품기업 육성이 문제를 막을 대안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부품 국산화 같은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은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국가에 따라 노동자들을 서로 경쟁하고 반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부품 국산화 요구는 한국 노동계급이 중국 노동계급에게 등을 돌리게 하면서 한국 자본가들에게는 타협적인 태도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부품 국산화를 하려면 노동자들이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협조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가 노동운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미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 바람이 불던 때에

확정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하자 문재인 정부는 국민 단결 기치를 내세워 기업 지원을 확대했다. 산업 안전 규제를 풀고, 노동시간 연장을 추진했다. 그러나 노동운동 측에서는 정부의 이런 조치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민주노총, 정의당, 민중당 등 노동계 주요 조직들은 일본산 불매운동에 동참하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 계약에 맞선 투쟁 조직에는 충분히 힘을 쏟지 않았다. 당시 현대자동차 지도부는 파업을 유보하기도 했다.

지금도 정부는 대규모 기업 지원과 반 노동 정책을 펼치고, 기업들은 회사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공격들을 하고 있다. 감염 우려 때문에 격려되는 노동자에게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소독업무 등을 위해 인력 총원도 하지 않으면서 과중한 업무를 떠넘기고 있기도 하다. 르노삼성에서는 이 시국에 희망퇴직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런 공격에 맞서려면 부품 국산화 같은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기업주와 정부에 맞서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물론 부품 국산화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노동계급에게 고통을 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반감이 반영돼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민족주의적 대안을 추구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계급 협조 강화라는 나쁜 효과를 낸다.

노동계급의 삶을 진정으로 개선하려면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 임금 인상, 일자리 등을 지키기 위해 기업주들과 지배자들에 맞서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각국의 지배자들에 맞서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국제 연대로 확대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프랑스 노동자들의 파업을 보며 여러 나라의 노동자들도 영감을 얻듯 말이다.

중국의 생산 중단 사태로 한국의 공장이 멈추는 상황은 노동자 투쟁이 국제적 힘을 발휘할 물질적 조건이 형성돼 있음을 보여 주기도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자동차 공장 휴업

공장 가동 위해 ‘자가 격리’ 하라며 임금은 안 준다고?

김승현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현대차 등 국내 자동차 공장이 지난주부터 조업을 중단한 바 있다. 핵심 부품 중 하나(와이어링 하니스)를 거의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이 부품을 생산하는 중국 공장들이 가동을 멈췄기 때문이다.

기아차도 소하리·광주 공장이 2월 10일(월)부터 가동을 멈췄고, 화성 공장은 10일 하루 휴업 뒤 다시 공장을 돌렸다. 부품 수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한 대라도 더 팔려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기아차 사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말뿐이다.

얼마 전 사측은 설 연휴 기간에 가족과 함께 중국 여행을 다녀온 노동자들에게 14일간 출근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강제성 있는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는 설 경우 귀국일 기준 14일 근태 무급처리(미출근무급휴무)를 하겠다고 했다.

사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가능성과 이로 인한 조업 중단 사태를 걱정하면서도, 강제로 쉬게 할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책임을 피하려고 한 듯하다. 그러니 휴무를 개인이 판단하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 다녀온 일부 노동자들은 출근해 라인에서 일을 하기도 했다. 동료 노동자들은 사측의 무책임한 조치 때문에 전염 가능성을 우려하며 일해야 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모여 일하는 조건을 고려하면 본인과 주변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이러스 잠복기 동안 충분히 쉬 필요는 있어 보인다.

하지만 무려 14일에 이르는 잠복기를 무급으로 쉬어야 한다면 임금 손실이 커 생활에 어려움이 생긴다. 영세한 노동자들과 일당직 노동자들은 보름간 생계를 꾸려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먹고사는 문제로 감염 우려를 숨기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사측이 노동자에게 14일 동안 무급으로 쉬지, 출근할지 선택하라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조치다. 국가와 사업주는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 무엇보다 사측이 출근하지 말라고 권고한 까닭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노동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필요한 일관된 방역 지침을 내려 기업주들이 제멋대로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인터뷰

“신종 코로나, 지금이라도 공공의료 강화해야”

중국인에 대한 편견 부추기기는 도움이 안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사망자가 1100여 명을 넘어섰다. 2월 12일 현재 한국 감염자 수는 28명이고 30곳 가까운 나라에서 계속 환자가 늘고 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를 만나 현 상황과 정부의 대처에 대해 들어봤다. 우석균 대표는 공중보건을 전공한 의사이기도 하다. 전문은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Q 현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중국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감염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장성과 광둥성에서도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오네요. 워낙 숫자가 많기는 하지만 후베이성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제한적 전파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핵심 도시들에서는 감염자가 수백 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으려고 시진핑 정부가 춘절 연휴도 연장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 것 같아요.

한국도 제한적 전파 상황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7일 현재 환자가 24명까지 늘었는데요, 이 중에 2~3차 감염자는 9명이에요. 중국인을 포함해 중국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11명이고, 모두 우한 지역에서 감염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감염돼 입국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상황이지요. 오히려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감염돼 입국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직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령을 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방적 조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은 근거가 없는 조치예요. 예방은 중요하지만 이처럼 근거 없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칫 중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편견만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가 말한 것처럼 감염자들이 방역망 바깥으로 숨도록 하는 효과도 나요. 그러면 더욱 큰일이죠.

Q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분명히 메르스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초기에 투명하게 정보를 알려야 한다는 점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이전 정부보다 나아진 점은 이게 전부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지정 설치한 음압 병상 수는 200개 남짓인데요, 메르스 당시와 비교하면 꽤 늘어난 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전 박근혜 정부가 늘렸던 거예요. 현 정부 들어서 추가 설치된 음압 병상은 없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겪고 나서 2016년에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민간병원도 300병상당 1개씩 음압

병상을 설치하도록 했죠. 100병상이 추가될 때마다 음압 병상도 1개씩 추가하도록 했을 겁니다.

그러나 2018년까지도 국내 최대 민간병원 두 곳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 뒤로 설치가 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법을 고쳐도 지키지 않고, 이를 감독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국가 지정 음압 병상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들어진 지 20년 가까이 되는 것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시·도 지정 음압 병상이 몇백 병상 된다고 하지만 사실 거의 부실한 곳이 많을 듯합니다.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곳이 광주 21세기 병원이었잖아요. 메르스 때 평택이랑 똑같은 상황인데요. 엄마를 간병하던 딸이 2차 감염됐습니다. 정부가 확대하겠다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대로 늘어나고 작동했다면 이런 일은 피할 수 있었겠죠. 이 병원에 있던 환자를 다른 병실, 다른 층으로 옮겨서 격리 중인데 유명한 정형외과 '전문병원'이다 보니 감염병에 대비할 인력이 전무한 겁니다. 인력 2명을 구하느라 전국의 의료 인력 전체를 다 뒤졌다고 하더군요.

문재인 정부는 100대 과제 등에서도 권역별 지역거점병원 등 감염병 대처를 위해 공공병원을 짓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됐죠.

다음으로 병원 인력과 방역 인력 문제에서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방역을 위해 군인과 군의관들을 대거 투입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군인들은 뭐가 됩니까? 공공의료 인력도 부족하죠.

예컨대 의사들 중에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게 감염내과 의사인데요. 이들은 당장에 돈벌이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의료시설이 있어야 취업이 잘 됩니다. 그런데 공공의료시설이 적으니까 애당초 지원도 잘 안 합니다. 인기과가 아닌 거죠.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보건의료를 바이오헬스로 부르면서 3대 투자 분야로 설정하고 병원 지주회사들 통해 대형병원을 영리병원화하고 있어요. 또, 빅데이터를 앞세워 건강보험공단의



“중국인들의 식습관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시장주의와 비민주적 시스템이 이번 사태를 낳았습니다”

개인의료정보를 기업에게 넘겨주고, 보험법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도 추진하고 있죠. 박근혜 정부보다 더한 의료 민영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투명성 문제에서 일부 개선이 있습니다. 둘째, 시설 문제로 보면 개선이 없습니다. 셋째, 인력도 개선이 없습니다. 넷째, 의료민영화는 더 정교하고 일관되게 추진 중입니다.

Q 정부가 중국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고 비판하셨는데요.

교육부가 이번에 대학 개강을 연기하라고 권고했는데요. 물론 고려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걱정도 되고요. 하지만 정부가 이런 조치를 발표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조치가 일관성이 있으면 지금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격리하거나 입국을 막아야 하는 겁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지금 그 정도 상황은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요. 즉,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다면서 오히려 중국인 학생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있는 거죠.

대한의사협회는 벌써 4번이나 중국 전역에서 입국을 막으라고 요구했다

는데 과도한 조치입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냥 가능성이 '0'이 아니니까 막아야 한다는 식이면 싱가포르, 태국, 일본으로부터의 입국도 막아야 해요.

Q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은 좀 더 확산할 것으로 봅니다. 다 막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입국 금지 조치는 신중해야 합니다. 숨어 들어오면 추적도 못 하고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 효과를 내죠.

한국은 이번 사태를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크게 확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특히 중국과의 왕래가 많은 지역인데요. 지금 경기북부는 명지병원, 경기남부는 분당서울대병원 두 곳으로 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병원들을 정부가 더 짓고 네트워크화해야 합니다.

공공의과대학 설립 계획도 지지부진하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의대 정원을 늘리는 등 의료 인력을 늘려야 합니다. 국립대학교의 경우 30~50퍼센트 가량 정원을 늘리고 무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시설에서 10~15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할 수 있죠.

의사협회는 중국인 입국을 막으라는 얘기만 하고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차별적 조치도 중단돼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인들의 식습관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비민주적인 시스템 등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중국은 굉장히 시장화된 의료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공중방역 시스템을

안 좋고 이런 요인들이 겹쳐 이번 사건이 생긴 거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매우 원시적인 방역을 해요.

이 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인플루엔자(독감)로 매년 3만 명이 사망한다고 하네요. 둘 다 시장 중심 의료체계에 빈부격차가 심하고 공공의료가 취약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쯤 돼야 세계 1~2위를 할 수 있나 봅니다.

요컨대, 비난해야 할 것은 중국 정부의 비민주적이고 군사주의적인 정책,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조래하는 극단적 시장주의입니다. 반면, 중국인들에게 필요한 건 인종차별적 비난이 아니라 연대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돼야 합니다. 특히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서비스부문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충분히 지급하고 손을 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족 등 환자가 생겼을 때 이를 돌보기 위한 유급휴가가 보장돼야 합니다. 또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장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도 보장돼야 합니다.

병원 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차별 때문에 생긴 문제는 메르스 당시에도 알려진 바 있어요. 이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에서는 5~6년마다 감염병이 도래하고 있는데, 역대 정권들이 다들 한 번씩 겪었죠. 그러나 개선이 없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두 번째 겪고 있지만 개선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진보적 정권이 들어설 필요가 있죠. 더 나아가 자본주의 자체를 넘어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인터뷰·정리 장호중



인천공항 청소노동자. 이들이 안전해야 모두 안전하다

화장실 이용, 취업 … 무엇 하나 쉽지 않다

트랜스젠더가 마주하는 차별의 현실

성지현

최근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과 트랜스 여성의 숨병여대 입학 포기가 논란이 되며 트랜스젠더 정점이 떠올랐다. 이번 논란은 그동안 투명 인간처럼 존재했던 트랜스젠더가 우리 일상에 학우, 동료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삼 보여 줬다. 한편, 트랜스젠더에 대한 무지와 편견도 만만찮게 뿌리내리고 있음이 뚜렷이 드러났다.

트랜스젠더는 태어날 때 부여된 성별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이 다른 사람들을 말한다. 최근에는 성별 표현, 성별 정체성 등이 사회의 성별 규범과 어긋나는 사람을 지칭하는 폭넓은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한국 사회에 트랜스젠더의 존재가 널리 알려진 것은 2001년 하리수 씨가 TV에 등장하면서다. 이후 트랜스젠더는 분명 더 많이 드러났지만 대다수는 차별과 혐오 때문에 숨죽여 살아가고 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트랜스젠더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된 적이 없다. 미국 트랜스젠더 인구는 전체 0.3퍼센트로 추정된다. 이를 참고하면, 한국 트랜스젠더 수는 5만~25만 명으로 추산된다(‘한국 트랜스젠더 의료접근성에

대한 시론’, 〈보건사회연구〉).

트랜스젠더는 이 사회에서 여러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며 고통받는다. 가족, 학교, 직장, 군대, 투표장, 화장실 등 이 사회 곳곳에 성별 이분법이 뿌리내려 있기 때문이다.

트랜스젠더 차별 현실을 생생히 다룬 《오랫만 당신: 트랜스젠더, 차별과 건강》(김승섭 외, 숨쉬는책공간, 2018)에서 한 20대 트랜스남성은 이렇게 말한다.

“한국에서 가장 힘든 건 화장실 사용이죠. 일단 여자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어어, 어어’ 이러고, 남자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뭐가 제가 좀 불안하고요, 그냥 난 딱 감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안에 있다가 밖에 사람 소리가 나면 문을 열고 다시 나갈 용기가 안 나요.”

누군가는 쉽게 하는 일

매순간 트랜스젠더들은 성별 이분법 장벽에 부딪혀 크게 좌절하곤 한다. 한 곳에서 모든 사람은 출생 신고와 동시에 성별 정보가 담긴 주민번호를 부여받는다. 많은 트랜스젠더가 공공 기관에서 서류를 떼거나 휴대폰을 계약하고 은행 업무를 볼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따가운 시선을 느끼며 모욕적 경험을 한다. 그래서 누군가는 쉽게 하는 일들(투표, 공공 화장실 사용,

목욕탕 가기 등)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것은 직장을 구하는 데서도 큰 장벽이다. 주민번호 성별 정보와 외양이 일치하지 않아서 면접에서 거부당하기도 일쑤다. 그래서 훨씬 열악한 직장(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을 전전하기도 한다. 실제로 트랜스젠더는 소득수준이 더 낮고 고용상태가 불안정하다(〈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2014).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온 종게 취직이 돼도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

꼭찍한 현실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도 매우 높다. 한국과 서구 모냐는 딱 감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안에 있다가 밖에 사람 소리가 나면 문을 열고 다시 나갈 용기가 안 나요.”

이 때문에 많은 트랜스젠더가 법적 성별 변경을 원한다. 한국은 2006년부터 법원에서 법적 성별 변경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기준은 여전히 매우 까다롭다. 특히 성별 지정 요건을 명시한 대법원 예규는 성전환 수술을 조건으로 걸고 있다. 이는 트랜스젠더에게 큰 부담을 준다. 트랜스젠더가 모두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것이 아니거니와, 원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비용에 가로막히기 때문이다. 호르몬 투여, 성전환 수술 등

성별 전환을 위한 의료적 조치를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온전히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성기 성형 수술은 평균 1514만 원(트랜스 여성), 2057만 원(트랜스 남성)이 들 정도로 과중한데 말이다.(‘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절차 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

다행히 최근 일부 법원에서 성기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정정을 인정한 판례들이 나왔다(2013년 여성→남성 인정, 2017년 남성→여성 인정). 그러나 판사에 따라 판결이 제각각이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보수적 편견을 마주하기도 한다.

우파들(특히 일부 보수 개신교계)은 편견을 부추기며 트랜스젠더 처지를 더 악화시키려 한다. 지난해 11월 자유한국당 의원 안상수는 국가인권위법을 개정해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리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로 규정하는 조항을 삽입하려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3의 성’을 인정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반동적 대응이자, 총선을 코앞에 두고 지역구의 보수 개신교계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었다. 애초 개정안 발의에는 일부 민주당 의원도 합세했다(후에 반발이 일자 철회했다).

여성성과 남성성

우파들은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자나 성 범죄자처럼 묘사하며 트랜스젠더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안타깝게도 일부 급진 페미니스트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곤 한다.

하지만 타고난 성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이 다른 존재들은 소수이지만 인류 역사 어느 때나 존재해 왔다. 예컨대 아메리카에 살던 수렵·채집 집단에서는 생물학적 성별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성별로 살아가는 ‘두 영혼의 사람들’이 존재했고, 이들은 사회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며 존중받았다.

엄격한 성별 규범은 계급 사회 등과 함께 시작됐다. 계급 등과 함께 남성 우위의 가족 제도가 발전하며 여

성에 대한 체계적인 차별이 발전했고, 엄격한 성 역할과 성별 규범도 강화됐다.

트랜스젠더들이 여전히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여전히 개인적 관계에서부터 직장 유닛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남자 또는 여자라는 범주로 옥여넣기 때문이고, 자본주의 지배자들은 노동력 재생산 부담을 개별 가족에 떠넘기면서,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인양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부추겨 왔다.

여성·성소수자 등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트랜스젠더 권리(자신이 바라는 성별로 온전히 인정을 받고 살아갈 권리)를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 더 나아가 성별 규범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맞서야 한다.

추천 책



로라 마이얼, 안효영 외 지음, 정진희 엮음, 책갈피, 184쪽, 9000원

트랜스 여성의 목소리

“트랜스젠더를 한 인간으로 대하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트랜스 여성의 여대 입학 포기 논란을 보며 특히 트랜스젠더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트랜스젠더 당사자에게 차별의 현실에 대해서 들어 봤다. 그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트랜스 여성이다.

트랜스 여성의 여대 입학 포기, 그전에 있었던 변희수 하사 사건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왜 하필 여대를 택해서 저렇게 비난과 모욕을 들어야 할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거의 두 명 뭉만큼 일해도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받으며 야근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일자리를 구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 보니 부당한 일을 당해도 일자리를 잃을까 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일자리도 정말 어렵게 구했어요. 이력서를 넣어도 주민등록번호랑 외모가 다른 걸 보고 ‘이건 뭐지?’ 하며 수순대다가 ‘연락 줄게요’ 말 한마디 하고 그냥 ‘커트’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페미니즘 동아리들이 낸 법적 성별 정정을 금지하라는] 입장도 봤습니다.

얼마 전에 성별 정정할 때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 와야 하는 요건이 없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러냐 여전히 벽이 높아요. 일단 성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위험하기

도 하고 몸에 부담이 많이 가요. 의료보험도 하나도 안 되죠. 수술 비용만 드나요? [수술하러] 해외로 가는 비용, 거기서 숙박 비용, 쉬는 동안 드는 비용 다 합치면 엄청나죠.

요새 젊은 사람들 중에는 영리하게 차근차근 준비해서 자기 기반 마련해 놓고 성전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물론 그런 사람들은 원래부터 배경이 받쳐 주는 경우들이 많지만요.

저 같은 사람들은 성별 정정도 못하고, 일자리도 못 구하고 정말 어렵게 살아갑니다.

트랜스젠더는 보통 사람들에 비해 절반을 손해 보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격정하지 않아도 될 것, 남들이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는 신경쓰면서 살아야만 해요.

‘그렇게 안 살면 되잖아’ 하는 말도 듣는데요.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갑자기 다른 사람 몸으로 바뀐다면 어쩔 것 같나요.

이번 논란 속에서 트랜스젠더 반대하는 쪽은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사람일 뿐인데요, 트랜스젠더를 특별 대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저 한 인간으로 대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인터뷰·정진희

트랜스젠더와 일부 급진 페미니즘

안효영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공저자

반대 때문에 트랜스 여성 A씨가 여대 입학을 포기하면서, 페미니즘과 트랜스젠더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A씨의 여대 입학에 대해 6개 여대의 21개 급진 페미니즘 동아리가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는 성별 변경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에 동조하며 부산 여성단체연합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여성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이 여성해방의 운동의 전략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태도는 편협하기 짝이 없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과정에서 A씨를 포함해 많은 트랜스젠더와 그 가족들이 크게 상처받았을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그러나 이렇게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일부 급진 페미니스트들이 여성 일반은 말할 것도 없고, 페미니스트 전체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A씨의 입학을 환영하는 페미니스트들도 많았다. 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여러 주류 여성단체들, 학자, 활동가 등이 A씨의 여대 입학을 지지했다.

본지가 반복해서 지적했듯이, 성별 정체성은 흔히 오해하듯이 단지 ‘느낌’이나 ‘기분’이 아니다. 성별 정체성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대한 내면적 인식과 사회의 성별 규범이 상호작용하면서 생겨나는 실제적인 것이다. 성별 정체성은 개인의 핵심 자아 중 하나로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서구에서도 트랜스젠더 차별 문제를 놓고 페미니즘은 상당히 첨예하게 분열해 있다. 한편에서는 트랜스젠더를 비판하는 페미니스트들이 목소리를 높이지만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페미니스트들도 꽤 있다.

예컨대, 글로리아 스타이넬(1960~1970년대 미국 여성 운동의 지도적 페미니스트)은 애초 트랜스젠더에 비판적이던 자신의 견해를 바꾸어,

“트랜스젠더가 실재하는 진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르노 반대 운동을 주도해 급진 페미니즘의 아이콘처럼 여겨지던 캐서린 매किन도 트랜스젠더를 방어한다.

트랜스 여성의 입학을 반대한 일부 여대 학생들을 모두 혐오주의자로 치부할 수는 없다. 주도의 일부는 정말 트랜스젠더를 혐오하는 성 역할에 반대하면서 생겨나는 실제적인 것이다. 성별 정체성은 개인의 핵심 자아 중 하나로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서구에서도 트랜스젠더 차별 문제를 놓고 페미니즘은 상당히 첨예하게 분열해 있다. 한편에서는 트랜스젠더를 비판하는 페미니스트들이 목소리를 높이지만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페미니스트들도 꽤 있다.

예컨대, 글로리아 스타이넬(1960~1970년대 미국 여성 운동의 지도적 페미니스트)은 애초 트랜스젠더에 비판적이던 자신의 견해를 바꾸어,

“트랜스젠더가 실재하는 진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르노 반대 운동을 주도해 급진 페미니즘의 아이콘처럼 여겨지던 캐서린 매किन도 트랜스젠더를 방어한다.

트랜스 여성의 입학을 반대한 일부 여대 학생들을 모두 혐오주의자로 치부할 수는 없다. 주도의 일부는 정말 트랜스젠더를 혐오하는 성 역할에 반대하면서 생겨나는 실제적인 것이다. 성별 정체성은 개인의 핵심 자아 중 하나로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서구에서도 트랜스젠더 차별 문제를 놓고 페미니즘은 상당히 첨예하게 분열해 있다. 한편에서는 트랜스젠더를 비판하는 페미니스트들이 목소리를 높이지만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페미니스트들도 꽤 있다.

예컨대, 글로리아 스타이넬(1960~1970년대 미국 여성 운동의 지도적 페미니스트)은 애초 트랜스젠더에 비판적이던 자신의 견해를 바꾸어,

A씨의 입학을 환영하는 페미니스트들도 많았다. 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여러 주류 여성단체들, 학자, 활동가 등이 A씨의 여대 입학을 지지했다.

본지가 반복해서 지적했듯이, 성별 정체성은 흔히 오해하듯이 단지 ‘느낌’이나 ‘기분’이 아니다. 성별 정체성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대한 내면적 인식과 사회의 성별 규범이 상호작용하면서 생겨나는 실제적인 것이다. 성별 정체성은 개인의 핵심 자아 중 하나로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서구에서도 트랜스젠더 차별 문제를 놓고 페미니즘은 상당히 첨예하게 분열해 있다. 한편에서는 트랜스젠더를 비판하는 페미니스트들이 목소리를 높이지만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페미니스트들도 꽤 있다.

예컨대, 글로리아 스타이넬(1960~1970년대 미국 여성 운동의 지도적 페미니스트)은 애초 트랜스젠더에 비판적이던 자신의 견해를 바꾸어,

급진 페미니즘과 정체성 정치

앞서 지적했듯이, 급진 페미니스트들 중에서도 트랜스젠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1960~70년대 미국 여성운동에서 부상해 오늘날 한국에서 득세하고 있는 종류의 급진 페미니즘의 사회관은 생물학적 결정론에 기초해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거나 이에 동조하기 쉽게 한다.

그런 급진 페미니즘은 여성 차별의 원인을 남성의 생물학적 본성으로 환원하고, 사회를 남 대 여 프레임에 끼워맞춰 설명한다. 생물학을 근거로 남성 일반을 ‘권력자로 규정하며 남성 일반이 여성 차별을 유지하는 데서 한몫 속이라고 본다. ‘남성은 잠재적 성폭력범’이라는 주장은 그런 급진 페미니즘의 유망한 명제다. 그래서 트랜스젠더는 그저 남자일 뿐이고 그래서 여성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게다가 이미 미국과 일본의 일부 여자대학교에서는 트랜스 여성 입학이 허용되고 있다(그중 일부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 여성의 입학도 허용한다).

지 않을뿐더러, 여성에 대한 범죄를 과장하고 공포를 부추기는 효과를 낸다(앞서 지적했듯이, 이번 트랜스 여성에 대한 공포 부추기기도 이와 관련 있다).

한 공포 부추기기도 이와 관련 있다. 생물학적으로 환원될 수 없다. 여성 차별은 역사적·사회적 산물이다. 인류 역사의 97퍼센트가 넘는 기간 동안 여성 차별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인류학적 증거가 매우 많다. 여성 차별은 계급 사회와 함께 등장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자본가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 가족제도를 유지하고, 노동제도를 이간시켜 각계각파하려는 전략이 그것이다.

여성 차별의 원인을 생물학으로 환원하면 또한 여성 차별 극복은 불가능한 일이 된다. 그렇게 여기면, 차별을 낳는 사회구조 전반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이 광범하게 단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제가 허용하는 몇몇 제한적 양보로 지키는 것이 거의 전부처럼 여겨지며, 차별받는 다른 집단의 존재를 무시하는 배타성이 생기게 된다.

관련된 급진 페미니스트들이 남성 일반을 모두 여성 차별(혹은 성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묘사하는 것은 현실과 맞

차별을 겪는 사람만이 그 차별을 이해하고 그에 맞설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성의 해방을 위한 투쟁을 자본주의 체제와 계급투쟁이라는 맥락과 분리시키면, 누가 ‘진짜 여성’인지를 가려내는 게 중요해진다.

이런 정체성 정치는 차별에 맞선 운동에 참가할 ‘자격’을 따지면서 운동을 오히려 협소화시킨다. 성별 정체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정체성 정치를 지킬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개인의 정체성과 상관없이 차별을 낳는 물질적 기반에 주목하고 가능한 광범하게 단결해 저항해야 한다.

여성 차별과 트랜스젠더 차별은 계급 사회라는 차별의 원천을 공유하고 있다. 트랜스젠더 활동가이자 레즈비언이자 마르크스주의자 레슬리 페인버그는 계급사회가 등장해 남성 우위의 배타적인 가족제도가 발전하면서 더 엄격한 성 역할과 성별 범주의 협소화가 강화됐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비난도 시작됐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여성의 해방과 트랜스젠더의 권리는 상호배타적인 게 아니다. 한 쪽의 조건이 침해받으면 다른 쪽의 조건도 결국 침해받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

에서 여성 차별과 트랜스젠더 차별은 서로 연결돼 있다.

비난의 화산

가족제도는 자본주의 하에서도 여전히 지배계급에 중요하다. 가족은 노동력 재생산에 핵심적 구실을 한다. 가정 내 여성의 육아와 가사라는 무보수 노동은 지배계급에 막대한 비용을 아껴준다. 이를 위해 지배계급은 고정된 성 역할이 마치 남성과 여성의 본성인 것처럼 설파한다. 사람들은 이분법적 성에 놓을 수는 없다. 대가족 소유자들보다 대다수 평범한 대중이다.

보수적 성규범으로 평범한 대중을 억압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와 그 수혜자들인 지배자들이다. 따라서 비난의 화산은 체제와 지배계급에 돌아가지, 트랜스젠더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성 차별을 받던 여학생들이 트랜스젠더 문제에는 기록권자가 됐다는 주장도 있다. 트랜스젠더 비판적 페미니스트들이 트랜스 여성이 ‘남성 특권’을 가지고 있다며 비판하면 그런 비판이 ‘시스젠더 특권’이라는 식이다.

하지만 이런 특권 이론으로는 서로에

대한 비난 헛바퀴를 벗어날 수 없다. 특정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특권을 누리고 그 차별을 유지하는 게 뉘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권 이론은 차별에 맞서 광범한 운동을 건설하기보다 운동을 파편화시킨다. 계급을 무시하기에 지배계급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 내에서 서로의 ‘권력’ 차이에 주목하게 해 분열을 촉진하기 쉽다.

트랜스젠더 비판적 페미니스트들은 트랜스젠더 차별의 원인이 아니다. 이들의 어떤 주장은 정말 듣기 괴롭지만, 이들과 막대한 권력을 가진 지배자들을 동급에 놓을 수는 없다. 대가족 소유들과 그 정치인들은 트랜스젠더 수만 명의 삶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지배자다.

여성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별 고정관념에 반대하며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무조건 옹호해야 한다. 그리고 모두가 자유로운 성별 표현과 섹슈얼리티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여성해방은 트랜스젠더 해방과 결코 분리할 수 없다.

필자 안효영은 여자대학을 졸업한 성소수자 활동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중국 대중, 시진핑에 분노하고 지식인들 항의하다

한수진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을 최초로 경고한 의사 리원량 씨(이하 모두 존칭 생략)가 2월 7일 사망했다. 그의 사망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일었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서는 '리원량 의사가 사망했다'는 해시태그가 붙은 글의 조회 수가 6억 7000만 건을 기록했다.

애초에 리원량은 SNS에서 신종 코로나를 경고했다가,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처벌당할 수 있다는 당국의 위협을 받고는 침묵했다.

중국 대중은 리원량의 용기 있는 행동에 고마움을 표한다. 이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원한다(我要言论自由)'라는 해시태그도 유행하고 있다.

2월 7일 우한 시내에서는 리원량을 기리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사람들은 오후 9시 전후 10분 동안 그를 추모하는 소동 행동을 했고, 내부고발자 리원량을 상징하는 의미로 호루라기를 불었다.

애도 열기가 크게 번지자 중국 당국은 황급히 리원량을 영웅으로 미화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시진핑 정부의 사태 은폐에 맞선 '내부고발자의 비통한 죽음'으로 여긴다.

변호사인 시민기자 천추스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우한으로 가 현장을 취재했다. 그는 1월 30일 올린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섭다. 내 앞에는 바이러스가 있고, 내 뒤에는 공안이 있다. 살아 있는 한 여기서 보도를 계속할 것이다. 죽는 게 두렵지 않다." 그는 지난해 8월 홍콩 항쟁을 취재하며 중국 정부의 거짓말과는 달리 홍콩에서 평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런 천추스가 2월 6일 중국 공안에 붙잡힌 후 행방불명됐다.

이윤을 앞세우며 공중위생과 보건, 방역 문제를 등한시해 온 중국 자본주의는 그 흉악한 물골을 또다시 드러냈

다. 신종 코로나 사태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런데도 지금 시진핑 정부는 대중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기보다 잘못 감추기에 급급하다. 열악한 의료 체계 속에서 불안에 떨던 대중의 목소리는 정부의 초기 대응에서부터 공개졌다. 중국 정부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으러대고 있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부의 강력한 언론 통제가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학자들이 시진핑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2월 6일 칭화대 법대 교수 쉬장룬이 외신과 SNS를 통해 중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 대응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베이징대 법학 교수 장첸판도 리원량 사망일을 '언론 자유의 날'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2월 9일 우한 화중사범대학 국학원 원장 탕이밍(唐翼明)과 동료 교수들이 공개서한을 내놓았다. 교수들은 이렇게 지적했다. "리원량의 경고가 유언비어로 치부되지 않았다면, 모든 시민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이 국가적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2월 4일 인권운동가 쉬즈용(許志永)은 웹사이트 '공민자유운동'에 시진핑 퇴진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올렸다.

신종 코로나 발병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동안 공식석상에서 도통 보이지 않았다. 비판이 거세지자, 2월 10일 뒤늦게 베이징 티단 병원과 베이징 차오양구에 위치한 질병예방통제센터를 공개 방문했다. 그러나 우한이 아니라 수도 베이징에서 공개 행보를 한 것은 분노한 대중을 달래기에는 속이 너무 뻘히 보이는 전시 행정이었다. 이런 행보가 '시진핑 책임론'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 날인 2월 11일 시진핑은 후베이성 보건당국인 위생건강위원회 주임과 당서기를 면직시켰다. 정작 본인



비난이 거세지자 뒤늦게 공개 행보에 나선 시진핑

은 후베이성에 발도 들이지 않으면서, 중간급 관료 몇몇에게 사태의 책임을 떠넘겨 대중의 시선을 돌리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도도 잘 먹히지는 않는 듯하다.

시진핑의 행보는 중국 정부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보여 준다. 대중의 건강과 제대로 된 사태 수습보다 책임 면피와 체제 안정이 더 중요한 것이다.

중국 자본주의의 우선순위가 초래한 재앙

신종 코로나 사태가 촉발한 공공연한 정부 비판과 반감 이면에는 중국 대중의 더 커다랗고 누적된 분노와 불만이 도사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현재 중국에서 농민공(농촌을 벗어나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들)을 비롯한 노동자들은 노조 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을 계승했다고 얘기하지만, 최근 대학가의 마르크스주의 동아리들이 노동자 투쟁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탄압받았고 관련 학생들이 잇달아 실종됐다.

오늘날 중국 지배자들은 안팎의 산

적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해 있다. 특히, 미국과의 경제·군사적 갈등, 이윤을 저하 등은 중국 지배 관료의 큰 골칫거리다.

이런 맥락 속에서 시진핑은 사실상 장기 집권을 위해 '시진핑 사상'을 강조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해 왔다. 또한 티베트·위구르의 소수민족, 노동운동가들에 대한 탄압도 강화했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는 최근 잇달아 대중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해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져 온 홍콩 항쟁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사태로 시진핑 정부는 다시 한 번 타격을 입었다.

2월 10일 시진핑은 "중국 경제의 장기 성장을 위한 기초는 여전히 튼튼하며, 우한 폐렴은 단기 영향에 그칠 것"이라면서도, "고용 안정과 실업 방지에 최우선 순위를 뒤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말미암은 경제적 타격을 염두에 둔 말이다.

그러나 이미 중국 기업주들은 신종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많은 중국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로 곤란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중국 광고업계 1·2위를 다투는 회사인 신차오미디어는 2월 10일 위챗

(중국의 카카오톡)에서 "기업 생존 차원에서 전체 직원 중 10퍼센트를 해고한다"고 공지했다. 해고 규모는 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신차오미디어 최고경영자(CEO)는 해고 대상이 아닌 임직원들에게도 연봉 삭감, 성과급 포기, 임금 동결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했다.

베이징에서 대형 노래방을 운영하는 '가라오케 킹'도 신종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을 내세워 200명 해고와 임금 체불을 단행했다.

중국 전역에서 체인점 360여 곳을 운영하는 '시베' 식당의 총 직원은 2만여 명인데, 이 회사도 경영난 때문에 임금을 제때 못 주겠다고 웨이보 계정을 통해 알렸다.

해고와 임금 체불을 강요하며 경영난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중국 기업주들의 대응은 냉혹하고 모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가장 많은 고통을 겪는 노동계급에 더 큰 고통을 얹어주는 것이다. 중국에서도 "해고는 살인이다."

시간 문제

신종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터져나오는 중국 대중의 불만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과 관계있다.

역사적으로, 큰 반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순과 불만이 끓어오르고 있다가 의외의(우연적) 사건이 불씨가 돼 분출하곤 했다. 1968년 5월 프랑스의 역사적 총파업도 그 발단은 낭테르 대학교 여자 기숙사의 남학생 출입 금지에 대한 반발이었다.

따라서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 본토에서도 홍콩 항쟁과 같은 바람이, 아니 그보다 더 크고 중대한 대중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 어쩌면 이는 단지 시간 문제일지도 모른다.

필자 한수진은 중국에서 10대를 보낸 대학생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감염병 확산을 촉진한다

환경 변화로 인해 인간이 동물 유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유리 프라사드**가 전한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감염되기 이전에 박쥐에서 다른 동물 종으로 전염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심각한 질병들이 비슷한 양상으로 대거 생겨났다.

조류 독감, 돼지 독감도 모두 해당 동물에서 왔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 모두 박쥐에서 비롯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인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전에 우한의 한 가축 시장에서 팔리는 가축들이 먼

저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인간은 예로부터 동물 유래 질병을 앓아왔다. 그러나 도시가 동물 서식지 로까지 확장되면서, 감염된 동물이 다 른 종과 접촉할 가능성이 유례없이 커졌다.

신종 바이러스들은 앞 세대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나 제3세계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부상한 대도시들은 새로운 감염병이 창궐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냈다.

대도시에는 가난한 사람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들고 슬럼에서 비좁게 살아간다.

자본가들은 이런 슬럼에서 이윤을 뽑아낸다. 그럼에도 그들은 초보적 위생 시설, 의료 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 한다. 심지어 식용가축과 사람들을 분리시킬 수단에도 비용을 들이려 하지 않는다.

감염병이 창궐하면, 도시 부유층이 영향을 받기 전에 노동계급 밀집 지역에서 급속하게 번질 수 있다.

도시는 일부 야생동물들(쥐, 여우, 원숭이 그리고 물론 박쥐)의 새로운 서식지이기도 하다. 도시 환경은 이런 동물들이 생존하기에 더 유리할 때가 많다. 기후 변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되는 숲과 밀림보다 도시에서 음식물 쓰레기나 은신처를 더 구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동물들은 신종 바이러스를 다른 종들로 전염시키는 매개체가 된다.

어느 나라에서든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보다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더 크지만 제3세계에서는 특히 더 그렇

다. 제3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은 지저분한 일이나 동물들과 가까이서 하는 일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만큼 감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식생활이 열악하고 공해에 노출된 탓에 가난한 사람들은 면역 체계가 더 약하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 치료를 받을 여유가 없어서 감염병 증상을 알릴 가능성도 더 낮다.

이러한 현실뿐 아니라, 공포를 부추겨 당사자의 증상 보고를 망설이도록 하는 것도 질병이 확산할 가능성을 높인다.

위기

리즈대학교 인구 생태학 교수 팀 벤턴은, 이처럼 감염병 발병 양상이 변하는 문제를 더 근본적인 체제 문제의 일부로 볼 때에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와 정부는 새로운 감염병을 독립적인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보다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변화의 한 징후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변화시킬수록, 기존 생태계가 교란되고 감염병이 대두할 가능성이 높아질다."

이 악순환을 멈출 방법은 있지만 어떤 방법을 쓰든 그 과정에서 이윤 지상주의에 도전해야 한다.

양질의 주거 시설 짓기, 공중위생 개선, 쓰레기 처리 과정 개선, 해충 방제 같은 조처들은 매우 중요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 자본주의 체제가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

교차 감염을 방지하도록 농축산 체계를 고안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나아가 인간과 야생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는 사고도 필요하다.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거대한 재앙이 터질 텐데도, 지배자들은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91호 / 번역 유나연

철도 통합 연구용역 강제 해지

문재인 정부의 KTX-SRT 통합 약속 폐기

이정원

최근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철도 통합(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 KTX-SRT)에 대한 연구 용역을 강제 해지한 사실을 폭로했다.

2월 12일 '민영화 안돼 철도하나로 범국민운동본부'와 철도공공성강화 시민모임도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 개혁이 좌초”되고 있다며 국토부를 규탄했다.

국토부는 KTX-SRT 통합 추진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어왔다. 뒤늦게 시작된 연구 용역조차 ‘철도 안전 점검이 우선’이라며 갑자기 중단시키더니 결국에는 최종 보고서 작성 전에 연구를 끝내 버렸다.

이번 연구 용역 강제 해지는 문재인 정부가 KTX-SRT 통합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준 것이다.

KTX-SRT 분리는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방안의 핵심 단계로서 추진된 것이다. 사실상 단독 철도 운영사인 철도공사와 경쟁하는 비중 있는 철도 운영사를 만들어 철도 경쟁체제를 구축하려는 구상이기 때문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SR 분리를 시작으로 철도공사를 여러 회사로 쪼개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다.

박근혜 정부는 상당한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SR 분리를 강행했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파업과 광범한 민영화 반대 운동의 압력 때문에 추가적인 민영화 추진은 진척되지 못했다.

따라서 KTX-SRT 통합은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을 되돌리는 중요한 조치이자 향후 추가적인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 철도 공공성 강화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통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당연히 KTX-SRT 통합을 포함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결국 이 약속도 완전히 사기였음이 드러났다. 철도 공공성 강화와 민영화 중단도 문재인의 수많은 거짓말 리스트에 포함됐다.

KTX-SRT 통합 약속 폐기는 단지 현 상태 유지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철도노조 박흥수 철도정책팀장은 현 정부 하에서 SR이 더 확실한 철도 운영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비판했



사진 출처: 민영화안돼 철도하나로 범국민운동본부

문재인의 철도 개혁 약속 역시 사기였다 2월 12일 철도 통합 연구용역 강제 해지 규탄 기자회견

다. SR이 민간 자본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1단계 구간의 운영사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처럼 현 정부 역시 역대 정부들이 추진해 왔던 민자 철도 확대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GTX 사업은 이명박 때 시작한 민자 철도 사업이지만, 실제 추진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시기를 앞당겨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5년마다 내놓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새로 짜야 하는 해이다. 철도 산업의 중요한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때인 것이다.

이런 때에 국토부가 철도 통합에 대한 연구 용역을 강제 해지한 것은 철도공사 민영화 정책이 되살아나는 신호탄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방안은 폐기되지 않았다. 철도 관제권 분리 방안 등이 거론되며 철도 경쟁 체제를 고착화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또 국토부는 철도의 부족 인력과 노동시간 단축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반대하며 인력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문재인 정부의 철도 정책에 대한 우려는 단지 기우가 아닐 수 있다.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 부활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

최근 철도노조는 대의원대회를 열어 3월 초에 인력 충원을 핵심 요구로 한 3차 파업을 결의했다. KTX-SRT 통합 폐기는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키우는 중요한 사안 중 하나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시온주의 반대가 유대인 혐오라는 이스라엘 지지자들의 비방
- ★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 ★ 《브렉시트와 유럽연합 —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세계경제의 불확화를 전망한다》 서평
- ★ 다가오는 춘선: 혼란을 거듭하는 공식정치
- ★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가 개혁? 추미애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 ★ 서울지하철 기관사 대량 징계 시도 즉각 중단하라
- ★ 서울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안전과 인력 요구하며 싸우는 여성 노동자들
- ★ LG헬로비전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사망할 동안 영업이익 1800억 원 올린 LG유플러스

〈노동자 연대〉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 ★ 안드로이드 앱: 플레이스토어에서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 ★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로 검색 (“신문”을 팔로우하셔야 합니다)
-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선택 후 Start 버튼
- ★ 트위터: @wspaper

온라인 구독 방법 한 눈에 보기
wspaper.org/online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

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 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체제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헌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연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 합시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이름

후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시/군/구까지)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동교회 () 기타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숨 걸고 가스 안전 지켰는데 자회사 꿈수 웬 말” 2월 7일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파업 집회 중인 노동자들

가스공사 비정규직 파업

자회사 강요 말고 노동자 탄압 중단하라

강철구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가스비정규직지부)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대구 본사에서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이 1월 2일, 13일에 이어 1월 28일 파업에 나서자 한국가스공사 사장 채희봉은 2월 7일 노동자들과 ‘집중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사측의 약속을 믿고 노동자들은 일단 파업을 중단했다.

그런데 한국가스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우롱하며 자회사 안을 강력히 밀어붙였다. 2월 7일 집중 협의에서 매우 고압적인 자세로 직접 고용 안은 얘기도 못하게 하는 분위기였다.

사측의 안을 확인하고 분노한 노동자들은 애초 2월 10일에 돌입할 예정이던 파업을 앞당겨 7일부터 돌입하고 본사 로비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10일에는 자회사 추진 본색을 드러낸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사장실 농성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의 파업 재개에 사측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파업 노동자들의 본사 건물 출입을 막기 시작했다. 사장실 농성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동시에 투쟁 대열을 흔들기 위해 이간질하는 방안도 내놔다. 사측은 2월 10일 ‘비서, 운전 및 소방직은 직접고용, 그 외 직종은 자회사 방식’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측이

직접고용 대상으로 뽑은 인원은 고작 120여 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10퍼센트 정도에 해당한다. 나머지 90퍼센트는 자회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노조가 사측의 이 안을 자회사 방안이라고 규정하는 이유다.

“용역보다 못한 자회사”

사측은 특수경비 노동자들과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을 분리해 두 개의 자회사로 쪼개려 한다.

특수경비 노동자인 김태형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 경기지회장은 “특수경비는 한국가스공사를 24시간 지키고 있다.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파업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특수경비만 별도의 자회사로 하면 노동조건이 더 열악해질 것이다” 하고 말한다.

사측은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직무급제를 도입해 정규직과 임금 차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태도다. 이미 자회사로 전환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용역회사에서 자회사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노동자들의 처우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2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한국가스공사 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이주용 한국잡월드 부분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용역이랑 다를 바 없는 게 아니라 용역보다 못한 게 자회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좋은 자회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8년 근무 직원과 오늘 입사한 직원의 임금이 같습니다. 현장의 처우

개선은 이뤄진 게 전혀 없습니다.

“3만 평 부지에 제대로 된 탈의실, 휴게실이 없습니다. 노조 탄압도 심합니다. 최저임금 2.9퍼센트 인상도 없습니다. 식대를 산입해서 최저임금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실수령이 160만 원인데 왜 최저임금 노동자가 아닙니까?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은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가지 마십시오. 끝까지 버티십시오. 좋은 자회사는 없습니다.”

사측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노사가 참여하는 4자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자회사 전환이 추진된 사업장들을 보면, 원청이 자회사 고용과 노동조건을 책임지지 않으려 해 공동협의체 구성 합의는 안 지켜지기 일쑤다. 구성된 곳조차 제대로 운영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자회사를 거부하며 투쟁하는 것은 정당하다. 한국가스공사는 자회사 추진을 중단하고 직접고용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

연대 확대가 중요

사측은 자회사의 필요성을 강변하며 “공정성·형평성”을 운운하고 있다.

또, 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반대를 근거로 자회사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런데 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에 근무하는 한 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응원하며 ‘정규직 노동자 다수가 직접고용을 반대한다는 사측의 주장은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정규직 업무를 외주화해서 비정규직을 늘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하며 차별을 유지해 온 사측이 “공정” 운운하는 것은 위선이다. 오랫동안 아무 문제 없이 업무를 잘 수행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험과 자격을 인정해 직접고용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

그런데 2월 11일 한국가스공사 정규직 2노조(무상급 노조) 집행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장실 농성을 비난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직접고용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을 압박한다고 보는 듯하다. 물론 사측이 이런 식으로 이간질하고 비용 절감을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노조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달려 있는 문제다. 정규직 처우 억제에 대한 불만을 비정규직 노동자 탓으로 돌리면 노동자 사이에 분열이 커져 사용자에게 맞설 힘이 약화될 뿐이다.

안타깝게도 같은 날 공공운수노조 소속 한국가스공사지부 집행부는 자회사 방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냈다.

홍종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장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정규직 집행부가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회사 입장을 낸 것은 정말 안타깝다. 노동자들끼리 분열하면 사측을 상대로 싸울 수 없다. 나중에 가스공사가 민영화나 성과연봉제 같은 공격을 당하면 무슨 명분으로 싸울 수 있나?”

그동안 비정규직지부는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을 사유화, 민영화해 오

던 과거를 바로잡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시작”이라며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호소해 왔다.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탄압하며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지금, 가스공사 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의 손길을 내밀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이로운 일이다. 외주화가 지속되고 노동자간 분열이 유지되면 사측이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에 하향 압박을 가하기 쉬워진다. 공공기관에서 수많은 비정규직이 양산됐던 지난 20여 년간 정규직의 조건도 공격받았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예컨대 올해 공공기관 직무급제 추진이 예고되고 있는데, 사측은 비정규직에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이어 정규직에게도 이를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전환 투쟁은 정의로운 뿐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가스 비정규직 파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는 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소속 노조인 교육공무직, 철도, 발전, 지역난방안전 비정규직 노동자들, ‘비정규직 이제그만’ 등에서 지지 인증샷을 찍고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연대를 표하고 있다.

사측의 탄압에도 굳건하게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가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